

지역산업 감산·감원 공포 엄습



문 닫은 공장 경기침체로 하남산단의 지난해 4분기 가동률이 60%로 떨어진 가운데 한 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장운영을 중단해 출입문에 자물쇠가 굳게 잠겨있다. /위직방기자 jwi@kwangju.co.kr

실물경제 침체 '고통의 계절' 시작

수출·내수 부진 생산성·공장 가동 뚝 고용 줄고 지역 상권 매출도 30% 감소

광주·전남 산업계에 경기침체(Recession)에 따른 감산(Reduction)과 실직(Jobless) 공포가 엄습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격히 전이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공장가동 중단, 감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생산력의 저하, 고용 감소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매출 부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역경기가 바닥을 친 뒤 하반기나 내년 초에나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정도다. <광주 생산성 크게 둔화>=무엇보다 기아차, 삼성전자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지역 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이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11월 말 현재 산업생산지수가 115.5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3%나 줄었다. 생산자출하지수도 마찬가지로 감소했지만, 재고는 많이 증가했다.

12월부터 하남산단 등의 공장가동률이 많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산업생산성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 기아차 광주공장 인근 상가의 매출이 크게 주는 등 지역경제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여수·광양 경제 '휘청'>=전남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산업생산지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정도다. 하지만, 재고가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25.3% 증가한 136.1%까지 치솟았다. 2년 전에 재고지수가 마이너스 상황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경영상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수 석유화학업체의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여수산단 주변 상가는 최근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천산 단내 입주업체들이 당장은 크게 공장 가동을 중지해서 종업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 성과급을 줄이는 등 최소한의 지출만 하고 있어 술집이나 음식점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천산단 관계자는 "조금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IMF 때와 달리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침체로 인해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며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어려움은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현대백화점, 기아차 감산 '불똥'

급료 준 직원들 씹씹이 줄여 전체 매출 3%까지 줄어들어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 침체로 인한 불똥이 현대백화점 광주점으로 튀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 연말부터 특근·잔업을 없애는 등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가면서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을 이용해온 근로자들이 씹씹이를

줄인 때문이다. 14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잔업·특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여 총액이 10~30%까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즉각 현대백화점 광주점의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아직 본격적인

실 대목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3% 줄었다. 전체 매출의 34%를 책임져온 기아차 광주공장의 직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그동안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에게 5~10% 할

인 및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우수고객 대우를 해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전체 매출의 3%가 감소하는 등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살이 다가올수록 매출 감소폭이 늘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1억주택 12만원→6만원 6억주택 154만원→81만원

■주택 재산세 개편... 얼마나 덜 내나

행정안전부가 14일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현행 0.15~0.5%에서 0.1~0.4%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나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주택분 재산세 인하 폭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율 인하>=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현재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액 가운데 4

천만원 이하 부분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0.3%, 1억원 초과 구간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오는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는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과표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르면 주택은 지난해부터, 토지와 건축물은 2007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

상돼 주택은 2017년, 토지와 건축물은 2015년부터 공시가격의 100%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기존의 과표 적용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주택의 과표는 공시가격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조정된다. <재산세 얼마나 내리나>=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표와 금액별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까지 과표 적용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주택별로 올해 내야 하는 정확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없는 상태다.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과표제도상 올해 적용 비율인 공시가격의 60%로 규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 과표(60%, 6천만원)와 세율(4천만원까지 0.15%, 4천만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원이지만 새 세율로 산출하면 6만원(6천만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제도에 따라 추후 과표 비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산출세액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6억원짜리 주택은 새 기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154만원에서 81만원으로 경감된다. /연합뉴스

주택분 재산세 개편 세부내용

현행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개편
과세표준 0.4억 이하	4~1억	1억 초과
세율 0.15%	0.3%	0.5%
	0.6억 이하	0.6~1.5억
	1.5~3억	3억 초과
	0.1%	0.15%
	0.25%	0.4%
현행	과표제도 개선	개편
과표 적용비율: 매년 5%p씩 인상	공정시장가액 도입: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① 주택: '08년 55% → 매년 5%p씩 인상 ('17년부터 100%)	② 토지·건축물: '06년 55% → '07년부터 매년 5%p씩 인상 ('15년부터 100%)	① 주택: 60% ± 20%p
※ '09년: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건축물(70%)	② 토지·건축물: 70% ± 20%p	
현행	세부담 상한율 조정	개편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3~6억	6억 초과
세부담상한 105%	110%	150%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3~6억
	6억 초과	세부담상한 105%
		110%
		130%

(자료: 행정안전부)

靑, 국제청장 조기 교체할 듯

청와대는 '한상물 국제청장의 학동 마을 그림 로비설' 등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자진사퇴 형식을 밟아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청을 포함,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장들에 대한 교체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기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사회와 함께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게 청와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동기 민정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청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장이 조기 교체로 결정될 경우 국제청 내부의 반목과 전직 국제청장들의 잇단 구속 등을 감안, 후임으로는 허용식 관세청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장은 유인과 교체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으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체될 경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방위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